

## 열린 세상



정진탄  
월간국장 겸 논설위원

“기존의 상식을 뒤엎어야 하오. 위축되면 더욱 그대의 길은 멀어진다오.”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어느 ‘도인’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면 하고 상상해 본다. 요즘 단체장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듯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다. 대놓고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하자는 표 날아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말하지 않더라도 이심전심으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혹시 단체장 사이이라도 대결 국면이 발생하면 타격이 크다. 상생이 시대정신이니 만큼 이에 반하는 행동은 욕먹이 십상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현안 및 개발 사업의 경우 재선 후보 미루는 게 상식이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냉전을 거듭하는 광주와 전남 행정당국이 서

로 조율한 행보를 보이다 못해 피하는 듯한 분위기도 이런 상식의 연장선에 있지 않은가. 오히려 광주와 대구 사이에, 또는 전남과 경북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한 듯하고 이런 모습은 광주·전남 양 행정당국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 ‘갈등 잠잠’ 선거 의식한 행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추진에 따른 동서화합의 교류 행사, 그리고 전남과 경북의 상생 협력회의 등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왠지 ‘한식구 광주와 전남’이란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느낌이다.

시아를 좀 좁혀 지자체 내에서의 단체장 행보를 보자.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 할 곳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비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광주지역은 공공성의 명분이 강한데, 이렇게 말하면 속이 갑자기 거북한 일부 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기업 유치에 공공성과 상업성의 가치가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전방과 일선방직의 재개발을 놓고 그러는 중이며 일찍이 어등산 개발사업 문제에서도 그랬다.

## 재선을 하려거든

이외에도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과 신양 파크호텔 부지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일마간의 이해충돌이 있었다.

주민과 현지 상인, 업체, 시민단체 등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 당국이 이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았다. 행정 당국은 민관협치란 제도적 명분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절차를 밟았고, 무리 없이 해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백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 협치의 이면에는 행정 당국의 책임 회피 성격도 있음을 전문가들은 빼놓지 않는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쯤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재선을 바라는 단체장은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항시 올바른 방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임기 후반 조율한 행보로 임기를 채워가는 것이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물론 최근 광주시의 ‘적극 행정’이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이다. 앞서 추석맞이 다양한 민생대책을 내놓는 가하면 취약계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니즈(Needs)를 충족시켜주는 모습 등은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활로가 열린다. 여권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지사가 인기를 누리는 것은 주저주저하지 않는 캐릭터의 영향이 클 것이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시대적 분위기를 리더로서 업(Up)해야 하는 측면과 자동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마치 비가 오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 기름진 빈대떡이나 호떡이 자연스레 당기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할까. 그래서 이 후보에게 천운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하면 과장일까.

## 벼랑 끝서 한발 내딛는 심정

애기를 다시 돌아와서 하면 지자체장은 사실 재선을 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것이 최우선이다. 재선하려는 생각이 자꾸 앞을 가리거든 벼랑 끝에서 한걸음 더 내딛는 심정으로 도전해야 한다. 이 경지에서 재선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재선 성공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언어와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 도인의 영역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어야 하오. 위축되면 더욱 그대의 길은 멀어진다오.”란 도인의 메시지를 상상해본 것도 이런 측면에서다. 한낱 장삼이사의 헛생각이라고 여기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그냥 소시민의 조그마한 바람 정도로 봐주면 좋겠다.

르담 항은 컨테이너 중심 항만 본래의 부가가치에 추가로 화학, 유통, 주변 산업 등을 연계시켜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역에서 자체 물동량을 충분히 창출해 외적 요인으로 인한 물동량 증감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광양항의 자생력이 갖춰질 것이다.

항후 경제의 규모화로 선박의 대형화, 물류 체인 터미널의 대형화 등 물류 서비스가 활발해지면 항만배후단지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이다. 저장 위주의 배후단지 기능을 넘어 배송, 제조, 가공 등이 모두 가능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해 완성형 항만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2년 고시 예정인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신규 지정이 필요한 항만 또는 부지를 반드시 반영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또한, 광양항 주변 지역에 특화산업 연계전략 구축과 전자상거래 및 언택트 시장에 대비, 항만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을 도입해 신제품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항만배후단지 확충정책을 10년, 20년 추진하다 보면 광양항은 우리가 꿈꾸어 오던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아시아의 로테르담형 항만으로 발전할 것이다.

와 직접 상담, 설문조사, 신고함, 교사제 일이나 학교명으로 된 메일 등을 비롯해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국번없는 117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117번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긴급상황일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다. 전화가 어려울 시 '#0117'로 문자하는 방법과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

/진병진 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 ‘대장동’에 묻힌 호남공약 대결 개탄

도대체 대장동이 뭐길래란 한탄이 나오는 지난 주말이었다. 물론 대장동 의혹에 대해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호남지역 경선에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대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현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공을 들여야 하는 게 또 얼마나 있는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양강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는 거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시간을 소비했다. 후보와 캠프 간,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대장동 관련 문제가 시급했는지 모른다. 호남인들도 그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며 중요하다고 봤을 것이다. 대권 후보의 자질과 국정 운영 능력 검증은 위한 것인데 왜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진정 호남, 광주·전남을 위해 왜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하는지도 지속적으로 밝혔어야 옳다. 단지 나열식으로 광주는 인공지능(AI), 전남

은 에너지 산업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해 급조한 듯한 인상을 줬다. 거개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정사업의 호남 차별, 소외로 대변되는 ‘기울어진 한반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펼치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위 호남대첩, 명낙대전 승자는 가려졌다. 정치의 속성상 명분대결, 상대측 발목 잡기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해도 이번 호남 경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보인 비관·신경전은 호남인들에게 상처를 줬다. 여권 내부의 후폭풍도 상당하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민들은 대권 후보를 통해 발전 청사진을 기대했는데 크게 미흡했다. 최종 대권 후보로 누가 결정되든 별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소비자물가 비상

한국전력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계속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와 이에 따른 한전의 적자를 더는 견딜 수 없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전기료 인상이 불고 공평상이 적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선 치솟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보다 3.0원 오르게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인상액은 당장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이미 물가가 전 정부지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이나 더해진다면 물가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도 덩달아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

우 4분기 전기료는 1,050원 정도 크게 된다. 이것만으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재료비인 전기료 인상은 아무래도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하수도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의 줄임상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우려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암울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필 어려운 시기에 전기료가 인상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디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에 필요한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

## ‘탄소중립’ 활발한 논의 필요하다

## 기지사침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보다 kWh당 3원 인상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이번 인상은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비 연동제한 3개월 단위로 전기료를 생산하는데 드는 연료비의 변동 폭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기요금까지 오르자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이번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중소기업 전용요금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관한 많은 것을 시사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에 기업, 가계 등 온 국민이 납득 가능한 이유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연료비 1㎾h당 발전 원가로 분석했을 때 원자력이 54원인 데 가장 낮았으며, 신재생에너지는 264.6원으로 가장 비쌌다. 값싼 연료 대신 비싼 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



오지현  
경제부 기자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더더욱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각 기업이나 가정이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당장 전기요금이 올라 내야 할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런 논의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에너지 요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이 아니라 모두의 파부와 닿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활발한 논의가 계속돼야 하는 까닭이다. 당장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높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자연을 복구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기고



강성온  
전남도 해양항만과장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0년 216만 TEU를 기록, 2019년(238만 TEU) 대비 9.2% 감소했다.

이는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영향과 환적물량(약 20만 TEU)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머스크사의 중남미 항로 폐지, HMM의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가입에 따른 항로 통폐합으로 중동노선의 폐지, 대중 무역 급증과 칭다오 항, 헨진 항 등의 북중국 항만개발, 베트남 등 남방 항로 개설로 인천항의 물동량 처리에 따른 위상 증가로 서해안 항만의 물동량 잠식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양항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동량 부족과 화물 유체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형화주 유치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 확보, 가공

및 제조업체 유치 등을 통해 단순 보관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여건이 필요하다.

광양항에는 현재 동·서측 2개의 배후단지가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동측 배후단지에는 33개사가 입주(194만㎡, 입주율 100%), 서측 배후단지에는 22개사가 입주(19만㎡, 입주율 76%)해 올해 안에 전체 항만배후단지가 100% 임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항만배후단지의 추가 조성이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자체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는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지연시킬 경우는 광양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2030)에 따르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개발 공급계획은 2020년 387만 4,000㎡, 2030년 398만 1,000㎡이다.

광양항 수출입 물동량의 감소로 인해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와 신규 물동량의 창출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항만배후단지가 항만물동량 전망치에 의한 수요상정으로 인해 배후단지의 공급이 축소됐다.

앞으로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해결과 화

물창출형 항만조성을 위해 우선 세풍 일반산업단지(33만㎡, 992억 원)를 2023년까지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고, 북측 배후단지(11만㎡)는 2025년까지 개발이 계획돼 있다. 제3투기장 재개발사업을 통해 읍촌 융복합 물류단지(433만㎡, 7,190억 원)를 203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 읍촌 제2산단(379만㎡, 9,269억 원)과 모도준설토투기장(312만㎡, 2,528억 원)을 2030년까지 개발하고 광역준설토투기장 배후단지(797만㎡, 2조5,455억 원) 조성을 2040년까지 완료하면 총면적 1,965만㎡ 규모의 거대한 항만배후단지가 완성되어 광양항 물동량 창출에 큰 변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중장기 배후 권역 확장을 통해 고정 수출입 물동량을 증대하고 환적 물동량 유인정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게 되면 물동량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해외 유명 항만들 사례를 보면 항만의 조기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배후단지와 배후지역 항만권의 산업을 결합해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항은 양산 항과 연계된 린강항만 신도시에 일반공단, 중화학단지, 첨단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설치해 제조업, 물류 기능의 중심지로 확대 개발 중이며, 로테

##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 다해야

안전제감도 제고 및 면학분위기 조성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절대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 외역 폭력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선생님을 비롯해 각 가정, 관계기관 등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런 행위들을 사전 철폐, 안전한 학교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혹시나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리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

| 생활정보전화       |           | 긴급전화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기상예보        | 131      |
| ▲응급질병상담      | 1339      | ▲법률구조상담      | 132      |
| ▲미아·가출인 신고   |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 222-5666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수도 고장신고     | 121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전기고장 신고     | 123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 ▲응급의료센터      | 1339      |              |          |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                                                                                                                                                                                                       |                                                                                                                                                                                                             |
|---------------------------------------------------------------------------------------------------------------------------------------------------------------------------------------------------------------|-------------------------------------------------------------------------------------------------------------------------------------------------------------------------------------------------------|-------------------------------------------------------------------------------------------------------------------------------------------------------------------------------------------------------------|
| 1989년 6월 29일 창간                                                                                                                                                                                               | <b>전남매일</b>                                                                                                                                                                                           |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
| 회장 <b>朴哲弘</b>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b>金善男</b>                                                                                                                                                                               | 편집국장 <b>姜聲秀</b>                                                                                                                                                                                             |
| 대표전화 062) 720-1000                                                                                                                                                                                            | 국록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                                                                                                                                                                                                             |
| 정 치 부 (062) 720-1060-62<br>경 제 부 (062) 720-1066-67<br>사회체육부 (062) 720-1050-53<br>사 회 2 부 (062) 720-1043<br>동부권본부 (061) 743-4200-01<br>문 화 부 (062) 720-1071<br>사 진 부 (062) 720-1040<br>기획팀사부 (062) 720-1045-46 | 편 집 부 (062) 720-1073<br>논 설 실 (062) 720-1006<br>전 산 실 (062) 720-1033<br>월 간 국 (062) 720-1007<br>판 매 국 (062) 720-1004<br>사 업 국 (062) 720-1011, 1099<br>광 고 국 (062) 720-1016-17<br>관 리 국 (062) 720-1012 | <b>기사제보</b><br>•TEL (062) 720-1050-53<br>•사회부 010-5601-2219<br>•FAX (062) 720-1080<br>•E-mail jndn@chol.com<br><b>광고문의</b><br>•TEL (062) 720-1016-17<br>•FAX (062) 720-1020<br>•E-mail jnmi1000@hanmail.net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                                                                                                                                                                                                             |
|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                                                                                                                                                                                                             |